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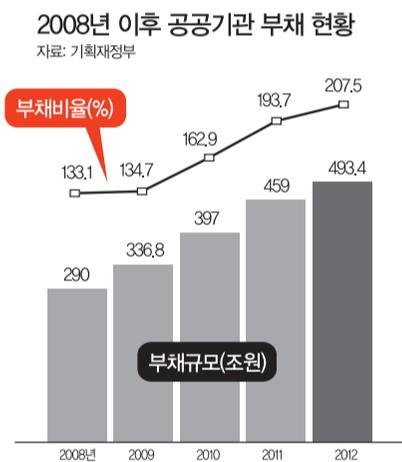
공공기관 부채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부

4대강 사업 12조, 보금자리주택 52조, 해외자원 개발실패 12조, 원가이하 공공요금 50조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주범 이명박을 처벌해야 합니다.

부채 늘리고, 뒷짐 지고 있는 정부 관료들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현오석 부총리는 사퇴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부채 5적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원에 이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리후생이 부채의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5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가 2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새누리당 정부가 공공기관을 빚더미에 올려놨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

코레일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 수자원 공사의 4대강 사업과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철도공사는 고속철도건설사업 부채를 떠맡아 4.5조원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12조원이,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52조원의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서 공공기관 부채 12조원이 늘었습니다.

재벌에게 특혜보장이 원인

공공기관 부채 중 상당수는 재벌에게 특혜를 보장하느라고 생겼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85.8%입니다. 국민들이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싸입니다. 게다가 30대 대기업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8천억원의 전기요금을 할인 받았습니다. 정부는 코레일이 연평균 5천7백 억원이 영업적자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중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화물운송 적자가 4천 억원이 넘습니다.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느라 국민철도 부채를 키웠습니다.

원가 이하의 낮은 공공요금

공공기관 부채 중 50조원은 전기·가스·수도 등 원가 이하의 낮은 공공요금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생긴 공공기관 부채가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이는 착한 부채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부채를 핑계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공기업 자산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는 오히려 국민 부담만 늘리고,
재벌에게 특혜만 보장합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는 철도 민영화

국토부는 트위터를 통해 “독점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주장하며, 경쟁도입이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공공성을 핑계로 모든 부채를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이런 여론 호도에도 불구하고, 국민 60%는 수서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 추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를 핑계로 경쟁도입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민영화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팔아라?

정부가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12곳은 비효율적인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사업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혈세가 들어간 국민의 재산입니다. 정부부처 중 국토부가 542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대부분 국가 기간시설이며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를 갚는다고 이를 팔면 기간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산업은 순식간에 마비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 민자도로처럼 높은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공공요금을 올려라?

정부가 공공기관 빚을 줄인다면서 공공요금을 올릴 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국민 부담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국민 부담 늘리지 말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공공요금부터 당장 정상화해야 합니다.

주요 공공기관 요금 인상안

자료 : 각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공공기관 | 인상안 |
|---------|-----------------------------------|
| 한국전력 | 총괄원가 회수 수준으로 전기요금 매해 상향 조정 |
| 한국도로공사 | 경차·출퇴근 할인을 감축, 서울 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 유료화 |
| 한국수자원공사 |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수준인 2.5%로 상수도 요금 인상 |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1. 부채 주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을 처벌하고 현오석 부총리는 사퇴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부터 근절해야 합니다.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경영효율의 큰 걸림돌입니다.
3. 부자 증세로 공공서비스를 지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로 생긴 세수 부족을 공공기관에 떠넘겼습니다.
4. 재벌에게 특혜 주는 공공요금 가격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재벌 특혜 철폐없이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기만입니다.
5. 공기업 채권을 모두 국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공기업 부채 하루 이자 2백여억원의 절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공공기관 운영을 민주화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재산인 만큼 공공기관 노동자와 국민이 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